

코리아연구원 논평 8호 (2010년 5월 28일)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www.knsi.org/ ☎733-3348, 팩스733-3358/ 100-855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6-28 우리함께회관 4층/ knsi@knsi.org

한반도 전쟁 위기와 안보 영역의 민주화

1. 안보 위기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일은 어떤 국가에게도 쉽지 않다. 많은 경우,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은 대중과 마찬가지로 공포에 따라 움직인다. 때로 권력집단은 대중의 공포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다. 정치체제의 차이도 공포의 정치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더욱이 대중이나 적대국을 겨냥해서 공포를 이용하는 정치나 전략은 종종 권력집단 자신들의 사고와 의식조차도 제한하고 왜곡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냉전체제 하에서 흔히 일어났던 일이다. 불행하게도, 2010년 5월, 한반도 전체는 이념과 광기에 휘둘렸던 냉전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한반도에서는 공포의 정치와 구조가 복잡하게 작동하면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해 왔던 미국도 위기 국면을 조성하고 활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1994년 봄의 전쟁 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위기를 진정시키고 안정을 되찾으려는 의지와 행동이 없다면, 한반도의 주민들은 상당 기간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시민들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비판에 기초하여 공포를 다스리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2. 천안함의 침몰은 분명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대한 사건이다. 대형 군함이 대규모 군사훈련 기간 동안 군사경계선 근접 지역에서 침몰하였다면, 침몰의 직접적 원인과 함께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은 군의 방어태세나 전술·전략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건의 원인과 정황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사, 초기 대응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평가, 그리고 조사 및 평가의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정책은 한국의 군사·안보·외교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다. 과거의 실패는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계기가 되고, 고귀한 생명의 손실은 더 많은 피해를 막는 진정한 희생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여러 조치들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미흡하고 편향되어 있으며, 심지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사·외교·안보 역량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대결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관점 또는 환원주의적 접근은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자연히 군사·외교 차원의 대북 강경 대응만을 제시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기본 골격을 짜맞추어보는 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항적 및 교신 기록 등의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국 정부의 사건 설명은 설득력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문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지 않은 사후 대응과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 발표의 반복, 군사기밀주의에 따른 무원칙한 정보 관리 통제, 국방태세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함께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나아가 기초 자료의 미공개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에 일정한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안보 중심의 대북 강경정책은 몇 가지 우려스러운 변화와 결합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균형 잡힌 주변국 외교는 완전히 사라지고, 한미 군사동맹의 논리가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축이 되고 말았다. 남북한 사이에 화해·협력의 시대를 여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경제·사회·문화 영역의 민간 교류·협력이 완전히 봉쇄되고 말았다.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깨어졌다.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1980년대 말에 등장하여 이십여 년 동안 발전되어 왔던 하나의 패러다임, ‘접촉을 통한 변화’와 ‘통일을 향한 평화’라는 한민족의 평화·통일 구상은 폐기처분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3. 천안함 침몰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반도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세움으로써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없애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군사기술이나 국방태세, 그리고 외교·통일 전략 차원에서 풍부한 교훈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더욱 더 고조되고 있다. 군사·국방 차원의 실패가 안보·외교 차원의 위기로 비화하기 직전이다. 더욱이 전쟁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경솔한 정책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민들의 합리적 문제제기를 정부가 안보 위기를 핑계로 억누르고 있다. 안보 영역의 민주화, 특히 안보 위기 해석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다. (2010/05/28) 

※코리아연구원(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 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을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